

민선 6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정책의 과제

글 · 송두범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I. 머리말

충청남도는 2011년부터 사회적경제를 핵심도정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운용, "사회적경제육성지원조례"제정,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 사회적경제부서의 기획관리실 이관,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설립(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연간 4회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등 전국의 그 어떤 자치단체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충남도의 의지와 사회적경제주체들의 관심과 헌신의 결과로 시·군별로 풀뿌리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성과도 개선되어 전국적으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올 만큼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행정의 입장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증대 및 민간역량 강화 등과 같은 점을 중시하는 사회적경제진영의 입장에는 성과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아직은 민관 모두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자치단체와 민간의 시각전환은 분명하고, 주류경제에 의해 야기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민선 5기 충청남도가 사회적경제를 핵심도정으로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시기라면 민선 6기에서는 충남의 주류경제가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류경제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에 확산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양산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선 5기 충남의 사회적경제정책을 회고해보고, 민선 6기 충남의 사회적경제 정책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충남의 지역발전정책과 사회적경제

1. 지역발전과 충청남도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이란 복수의 공간단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리적 영역을 대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필요한 물적 기반의 조성 및 사회경제적 제반조건의 개선을 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김용웅 외, 2003:32). 또한 UN경제사회이사회(Social Progress through Community Development)에서는 지역을 국가의 한 하부단위로 보고, 지역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주민들 자신이 정부의 노력과 협력하여 자신들의 마을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렇게 향상된 지역사회를 국가의 생명력으로 끌어올려 국가발전에 전체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과정”을 지역발전이라고 정의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지역발전이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의미하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은 물론, 사회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역사회가 보다 좋은 상태로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충청남도에서는 민선 5기 들어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더불어 잘사는 농어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3농혁신(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을 민선 5기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해 왔다.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지역리더 양성, 도농교류활성화 등을 5대전략과제로 설정하고 30대 중점사업을 추려 도정역량을 집중해왔다(충남도정, 2013:666).

민선 5기의 이러한 정책은 과거 외자유치, 기업유치 등을 통해 지역총량경제의 덩치를 키우는데 주력하는 등 충남경제의 동력을 외부로부터 찾는 외생적 발전전략의 한계와 반성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인을 지역내에서 찾고자 하는 내생적 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개발패러다임의 전환배경에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소위 수도권중심의 개발효과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확산되고, 대기업유치 등에 따른 파급효과가 중소기업으로 이전되는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대한 불균형개발정책이 오히려 권역간, 농촌-도시간, 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켜 도민의 균형있는 삶의 질 향상과 행복도 제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그간의 평가에 기초한 것이다.

아직까지 민선 5기가 마무리되지 않는 시점이지만, 3농혁신, 사회적경제 육성, 기후변화 대응 등 지역주도·주민주도로 지역내 순순환경제구조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시도해왔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에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고 할만하다.

2. 지역경제정책으로서 사회적경제의 도입

민선 5기 충청남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투자를 유치할 때 사회적 책임 이행,

● 특집4 _ 충남의 민선 6기를 묻다

지역민 우선고용, 일자리 창출 등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기존 양적투자유치에서 우량기업 및 지역사회 기여기업 유치로 전략을 수정해 왔다. 또한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외자 및 기업유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총량경제의 확충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나 지역민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헌, 지역사회친화형 기업 만들기를 강조해왔다.

주류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사회적경제를 핵심도정으로 도입하여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민간영역에서도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설립이 확대되었으며, 전국적으로도 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경제정책을 확산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민선 5기 충남의 사회적경제정책은 민간의 역량과 민간주도의 경제적 자립을 기반으로 하는 속성으로 인해 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시기이기도 했다.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과 달리 민간의 역량이 일천한 점은 사회적경제의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고, 기존 외래형 개발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경제주체들의 인식을 단기간에 개선하는 것 역시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 충남도정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여타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정책 도입에 상당한 자극을 준 것만은 사실이고, 지금도 많은 자치단체들이 사회적기업 경제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사회적경제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회적경제정책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선 5기 충남도정에서는 사회적경제영역의 양적인 확산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생태계 형성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주류경제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을 갖는다. 반면, 사회적경제를 자치단체 정책으로 도입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정책영역에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한 점은 특기할만하다.

특히, 전국처음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의 방향과 시책을 제시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운영, “사회적경제육성지원조례” 제정, “사회적경제5개년계획” 수립 등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경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Ⅲ. 민선 5기 충남도 사회적경제정책의 회고

1. 민선 5기 사회적경제정책의 개요

충청남도에서는 2009년 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2010년 민선 5기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민선 5기 초기에는 전국의 여타 자치단체와 유사하게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수동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머물러 있었다.

사회적기업시책을 늦게 시작한 점도 있지만, 타 자치단체에 비해 사회적기업수가 다소 부족하고 지역적, 사업분야도 편중되어 있으며, 사회적기업을 위한 생태계 역시 매우 열악함을 인식하고 사회적기업중심의 정책만으로는 기존 주류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충남 북부권 중심의 발전전략은 지역간 발전격차와 외부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켜, 성장과실의 외부유출 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의 연계가 미흡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제공이라는 사회적기업의 제한된 의미를 넘어 외생적 발전의 한계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자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도입하기에 이른다.

2011년에는 사회적기업 중심의 정책추진과 사회적경제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직과 제도를 정비한 시기라 할 수 있다. 2011년 1월 도 본청 경제통상실 일자리경제정책과내에 사회적경제TF를 설치하였고, 2011년 2월 고용노동부의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과는 별도로 충남발전연구원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사분석 등 관련 연구,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업무를 담당추진 해왔다. 2011년 2월에는 “사회적경제정책연구회”가 충남도의회에 설치되어 사회적경제정책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연구 및 활동이 이루어졌다.

2011년 4월부터는 충남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11회에 걸쳐 사회적경제연구회를 개최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정책의 이론적 정당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충남도 사회적경제정책의 전환점은 2011년 7월 연구원, 공무원, 교수, 활동가, 사회적기업가, 도의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충남사회적경제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 구성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기획단은 사회적경제정책기획 및 우선추진과제 진행상황 점검구조 위상을 부여한 한시조직으로, 충남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및 우선추진과제 도출, 사회적경제 담론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2012년 사업방향과 예산안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특집4 _ 충남의 민선 6기를 묻다

〈표 1〉 충남사회적경제기획단의 역할

구 분	역 할
사회적경제 정책설명회 개최	· 도지사, 부지사 및 전문가 간담회 · 정책기획단 참여대상 주요관련 부서장 대상 설명회 · 충남도청 및 군공무원 대상 순회설명회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정책방향 수립	· 충남사회적경제 mapping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5개년계획안 수립 · 충남사회적경제 대토론회 추진 · 사회적경제 전국대회 개최 · 주민창안제도 더불어 살기좋은 충남지역 만들기 운영
충남사회적경제 추진구조 점검, 조직개편 방안수립	· 충남사회적경제 현장 네트워크 구축지원 검토 · 사회적경제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확충 검토 · 중간지원조직 위상 재검토 및 장기발전전략 수립
중장기 발전과제	· 충남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체제 재구축 · 충남형 사회적기업 맞춤형 지원 전략 검토 · 사회적경제 리더 및 전문컨설턴트 육성지원 · 충남형 전략분야 및 시범사업 기획선정

물론 기획단에서 계획한 사업이 100% 수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사회적기업중심의 정책들에 머물러 있던 충남도정이 사회적경제정책으로 전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12년 들어 국내외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론 및 정책, 사례학습결과 몇 가지 성과를 도출하게 된다. 우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으로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및 “시군단위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설립으로 민간주도의 사회적경제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전국 최초의 “충남도 사회적경제육성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기획단은 2012년 8월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로 격상되어 본격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2013년 들어 충남도 사회적경제 담당부서는 경제통상실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기획관리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산하로 이관됨으로서 사회적경제정책의 기획 및 조정, 융복합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2. 민선 5기 사회적경제의 평가와 반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남은 타 자치단체에 앞서 사회적경제를 도입하여 추진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자평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동시에 노정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경제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즉, 사회적경제의 근본은 비영리 부영역, 자원봉사영역이라 할 수 있으나, 충남도에는 제3섹터의 토양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척박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이 되는 NGO영역의 저변확대와 조직화가 필요하지만, 대도시보다는 농어촌지역이 중심이 된 충남도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이나 공무원의 인식은 부족한 편이다. 물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정부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철학 속에서의 통합적인 인식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가 광역자치단체인 충남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시군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독자적 추진역량이 부족하다. 시군 행정조직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중요성이 낮고, 민간영역의 관심과 역량이 부족한 것도 한 요인이다. 시군에서는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사회적경제정책보다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물리적사업이나 기업유치 등에 더 많은 공을 들이는 관행이 여전하다.

넷째,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가치가 주류경제에 녹아들어야 하나, 지금까지는 주류경제와 사회적경제는 섞일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경제민주화, 기업의 사회적책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지방자치단체 경제정책에서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류경제와 사회적경제간의 융복합, 연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다섯째, 최근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이 활발하나, 창업과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은 미약하다. 대부분의 창업 및 운영자금은 자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고, 정부 및 자치단체차원의 사회적경제 기금조성도 미흡한 수준이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비금융권 협동조합을 통한 창업 및 운영자금 조달이 바람직하지만, 이 역시도 담보중심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

여섯째,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강제하는 조례가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정·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의 질이나 서비스의 수준이나 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생각하는 점도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일곱째, 사회적경제에 젊은 층의 활동 및 참여가 부족하다.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젊은 층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협동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자원, 프로그램, 전문가 등이 부족하다.

IV. 민선 6기 충남도 사회적경제정책의 과제

1. 사회적경제 인지도·융복합 행정의 강화

민선 5기 충남도정에서 사회적경제는 그 기반을 구축했던 시기라면 민선 6기 충남도정에서 사회적경제는 주류경제를 사회적경제와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특집4 _ 충남의 민선 6기를 묻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도의 지역경제정책을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방법을 적용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회적경제 인지적 융복합 행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류경제 정책은 속성상 총량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지만, 사회적경제와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기업의 사회적책임 등을 강조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따뜻한 경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관련사업도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다. 충남도 사회적경제부서를 기획관리실에 배치한 것은 조정 및 융복합기능의 강화를 통해 행정정의 비효율성을 저감하고, 행정의 시너지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공동체사업 등을 융복합 행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운영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서울, 인천, 강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단위의 사회적경제부서 설치가 필요하며, 사회적경제업무의 융복합조정을 위한 정책협의회구성 및 운영, 충남도 산하기관·출연기관의 사회적경제 공동사업 추진 등이 요구된다.

2. 사회적경제를 선도할 중장기적 인재 육성

민선 6기 충남도장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조직자체에 맞추기 보다는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에 맞출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상 낮은 보상체계, 협동과 연대라는 사회적가치보다 경쟁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구조, 영리와 비영리간 장벽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인재를 찾기는 어렵고, 인재육성에 오랜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민선 5기 충남에서도 인재육성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등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아카데미가 교육활동이었다면 이제 학습활동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진 학습모임(동아리) 결성을 지원하고, 초·중등학교, 대학교 등에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흥미있는 강좌와 필요하다면 정규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습활동은 흥미로워야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전문강사 육성도 요구된다. 또한,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한 사회적경제활동가를 양성하는 인재육성 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는 사회금융제도 확립

사회적경제 선진국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기금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캐나다 퀘백의 경우 협동조합기금, 노동자기금, 지역공동체기반 기금, 정부기금, 하이브리드기금, 민간기금 등 다양한 사회기금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은 정부재정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 역시 한시적이어서 재정지원이 중단된다면 자체적 재원조달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자체재원조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사회투자기금의 경우 민관 공동으로 조성하는 조건이 대부분이나 민간부분의 기금확보는 사회적환경, 제도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쉽지 않다. 결국 현재로서는 정부 등 관치금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향후 자치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금융제도가 민선 6기에는 확립될 필요가 있다.

4. 시·군별 특성화된 사회적경제시책의 추진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자국이 처한 역사적 배경과 자원잠재력 등에 의해 자국에 적합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우리 나라 역시 원주시의 협동조합도시, 완주군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서천군의 지역순환경제 등 차별화된 사회적경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충남도의 시·군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시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완주군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에서 보듯이 기초 자치단체도 지역특성과 자원잠재력에 기초한 독자적 사회적경제사업이 오히려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민선 6기 충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시·군별 특성화된 사회적경제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천군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지역순환경제라는 개념을 통해 구체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서천군의 시장경제-공공경제-사회적경제 영역 및 각 경제영역간 선순환경제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선순환경제지원센터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센터가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선순환경제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민선 6기 충남도 사회적경제정책은 사회적경제의 주체들이 활동하는 시군의 자원잠재력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사회적경제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집4 _ 충남의 민선 6기를 묻다

〈표 2〉 서천군 지역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구 분	민 간	행 정	거버넌스
주체 역량	① 주민교육 ② 마을단위 상호학습 ③ 지역리더아카데미	④ 공무원 교육 ⑤ 사업관련 부서간 워크숍 ⑥ 관련 사업 및 자원 통합	⑦ 주체 간 정기 워크숍 ⑧ 사업주체 발굴 및 확대 ⑨ 지역별·분야별 의제 발굴
기반 조성	① 지역별·분야별 민간네트워크 구성 ② 민간네트워크의 법인화 ③ 네트워크 회원의 확대 ④ 민간 지역순환경제기금 조성 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규약 마련	⑥ 지역순환경제 활성화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⑦ 전담부서 설치 ⑧ 전담인력 확보 및 교육	⑨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⑩ 민·관 역할 분담 ⑪ 활동가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⑫ 지역순환경제 홍보 ⑬ 서천지역순환경제기금 민관공동 출연 ⑭ 지역순환경제 주민한마당 개최
사업 실행	① 공동체 및 지역자원기반 사업계획의 구상 ② 대상별 사업계획 수립	③ 공공구매 등 관련제도 개선 ④ 지역내부 시장개척 지원	⑤ 정기적인 지역자원조사 ⑥ 사업모델 개발 및 인큐베이팅 ⑦ 자금 및 컨설팅 지원 ⑧ 사후관리 ⑨ 공동마케팅 계획 수립 및 추진 ⑩ 사례집 발간 및 성과측정

※자료 : 서천군, 2013, 서천군 지역순환경제 5개년 계획 연구, p.96.

5. 자치단체와 제3섹터간 협약을 통한 사회적경제 육성

1996년 ‘디킨 위원회 보고서’와 1997년 정책문서인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통해 영국정부는 건전한 자원활동 및 지역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3섹터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책임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제3섹터 간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에 따라 제3섹터와 정부 대표자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한 “협약(The Compact)”을 조약의 형태로 만들어 체결하였다.

협약을 통해 정부와 제3섹터 대표자들 간의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자원활동 단체, 자선단체, 지역공동체 조직 등을 하나의 섹터로 분류함으로써 정부와 공공부분이 제3섹터를 통한 사회부문으로 대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지방정부도 제3섹터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지역 ‘협약’은 전형적인 지역전략 파트너십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고든 브라운 영국총리는 “이 나라에서 국민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없다.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제3섹터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자원봉사조직과 단체, 그리고 사회적기업들이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정부는 제3섹터를 구성하는 수천개의 조직들과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통제해선 안 되며, 오히려 이들이 성장할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 주고 함께 일하는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선 6기 충남도정에서도 영국의 협약과 같이 충청남도과 충남도내 다양한 민간조직들을 제3섹터라는 큰 틀로 분류하고 ‘협약’을 맺어 제3섹터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진입할 수 있

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충남도내 수많은 비영리 조직이 존재하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조직에 대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통의 교육기회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민선 5기 충청남도가 핵심도정으로 추진해온 사회적경제정책은 제도, 조직 등 기반구축과 아울러 양적인 측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고, 타 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정책도입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였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에 대한 행정영역과 민간영역의 평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는 양자 간에 성과를 바라는 보는 시각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경제의 특성상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주류경제에서 보듯이 가시적인 총량경제지표의 향상보다, 사회적경제조직내 종사자들간의 호혜와 협력, 나눔과 배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덕목에 상대적으로 큰 가치를 두고 있고, 이는 단기간에 축적될 수 없는 자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민선 5기 충남도정 및 시군정에서 사회적경제는 그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였고, 양적인 성장을 추구했던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한 시기이기도 했다.

민선 6기 충남도정에서는 민선 5기 충남도 사회적경제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단계 성숙해짐으로써 주류경제의 대안경제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3섹터의 저변확대, 주류경제와의 협력, 사회적경제 인지적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정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정책을 수동적으로 수행하기 보다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재해석하고, 융·복합적인 행정을 통해 충남도민의 독창적 사회적경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인재육성로드맵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지원을 위한 사회적투자금융 도입에도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는 조직이 기반하고 있는 시군별로 차별화, 특성화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조직수나 종사자수 증가지표 등 가시적 성과보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원칙을 중시하는 거버넌스형 사회적경제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체들 모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응웅 외, 2003, 지역발전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충청남도, 2011, 충남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경제정책기획단 구성·운영계획.
서천군, 2013, 서천군 지역순환경제 5개년 계획 연구.
충청남도, 201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충청남도, 2013, 충남도정.